

제주도의 남북한 교류협력: 성과와 과제 그리고 발전 방향

양길현*

목 차

1. 서론
2. 지방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의 검토
3. 감귤보내기의 성과와 대북의료지원 가능성
4. 민족평화축전의 의미와 발전 가능성
5.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신의주특구와의 교류 확대
6. 결론

1. 서론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은 어느 타도-시에 못지않게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¹⁾ 특히 1998년부터 제주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전개한 사랑의 감귤보내기 운동은 남북한 교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뽑히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3차례 걸쳐 750여명의 제주도민이 제주-평양을 잇는 직항로로 평양-개성-백두산-묘향산 등지를 둘러보고 온 것은 제주도의 남북한 민간교류가 상당한 수준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다 2003년 10월 23-27일간 190명의 북한 체육-문화인들이 고려민항기를 타고 제주에 와서 친선경기를 벌이고 마라톤, 그네, 널뛰기 등으로 남북한 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벌임으로써 제주도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의 한민족 공동체의 시작이자 다리로서 위상을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1) 물론 제주도 이외에도 강원도, 부산시, 목포시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대북교류를 추진한 바 있다.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²⁾ 이미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제주에서 남북한 국방장관회담 등 장관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제주는 남북한 대화와 협상의 장소로서 역할하고 그럼으로써 제주가 남북한 교류협력의 메카로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널리 인정되어 왔던 터였다.

이 글은 이렇게 1998년부터 2005년까지 7년에 걸쳐 제주도가 추진하거나 또는 제주에서 개최되었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1) 제주도가 추진해 온 지금까지의 사업과 행사의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2) 향후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해서 기획-추진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의 영역과 사업방향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지방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의 검토

지방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대표적 논의로는 양현모(2002)와 문장순(2003)의 연구가 있다. 이 두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2000년대 지방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통해서 제주도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양현모와 문장순 모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와 “지방정부의 대북교류협력”이라는 연구 제목이 시사하듯이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과거에 남북한 교류협력을 독점해 온 중앙정부에 이어 민선 지방정부의 참여 내지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나 기업 또는 풀뿌리 국민들 수준에서 일어나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개과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소홀히 하고 있다.³⁾ 바로 연구자들이 “남북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채널과 교류방식의 다양화”(양현모

2) 이 외에도 한라산연구소와 백두산 천지연구소간에 교차 참사를 2004년에 백두산에서 하기로 합의도 했는데, 이 사업이 몇가지 절차상의 문제로 여전히 담보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의 아쉬움이다.

3) 물론 문장순(2003, 61)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남북한 교류협력 성공 사례인 언어공동방류사업인 경우 그것이 강원도민일보와 연어사랑시민모임의 공동 작품이라고 지적하면서 민간단체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2002, 68)를 강조하면서도 스스로가 정부 수준의 교류협력사업에 국한되는 논의의 협애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한 교류협력 논의는 '지방에서 일어나는 남북한 교류협력'이라는 것으로 실제적인 차원에서 시야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대북교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전시용 내지는 무리한 의욕 또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적 사업 발표 등을 부정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지방에서의 대북교류를 억누르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양현모 2002, 65) 그러나 사업의 전시성과 의욕적 추진 또는 경쟁적 사업 추진이 북한에 의해 악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패배의식이나 부정적 우려를 넘어서서 바로 이렇게 지방에서 전개되는 백가쟁명의 사업과 방안을 어떻게 조정하고 지원해 나갈 것인가의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사업 추진 모색이 더 중요한 요인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제주도 감귤보내기나 금강산 관광사업 등에서 보듯이 지방이나 기업 수준의 남북한 교류협력은 2004년도 북한핵을 둘러싼 북미관계의 악화라든가 기획 탈북으로 인한 남북한 관계의 냉각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에서 전개되는 남북한 교류협력이 긍정적 역할과 전향적 사업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지방의 대외적 교류협력은 경제-문화-예술-스포츠 등 비경제적 분야를 중심으로 자매결연 형식의 상호적 교류협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⁴⁾ 국가 수준의 입체적 교류협력과 비교할 때 선형 협력으로 전개되는 지방 수준의 자매결연은 대외적 교류협력에서 유용한 방식이며, 그래서 실제로 독일의 경우도 동서독 지방정부 차원의 자매결연 사업이 독일의 통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양현모 2002, 64) 그러나 문제는 자매결연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현금의 중앙집중적 북한에서는 지방 수준의 자율성이 부재하고 그래서 북한의 거부로 인해 남북한은 지방 수준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게

4) 그러나 필자는 문화-학술-스포츠 분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바라보는 통상적 의견에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교류협력 자체가 정치적인 사안인데, 그 내용이 비정치적인 것이라고 해서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이 비정치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필자는 통상 인도적 사업이라 일컬어지는 이산가족 만남도 정치적 맥락과 고려 그리고 계산이 개입되는 사업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불가능함을 지적하는 현실적 여건에 함몰될 뿐.(문장순 2003, 53-55) 보다 전향적으로 남한 정부가 나서서 지방에서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제안을 찾아보기가 어렵다.⁵⁾ 적어도 지방에서의 교류협력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중앙정부가 독점해 왔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을 어떻게 분권화하고 다각화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숙고와 방안모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⁶⁾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절에서는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제주도가 향후 전향적으로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능 영역을 찾아보기로 하자.

3. 감귤보내기의 성과와 대북의료지원 가능성

1998년 감귤 100만톤으로 시작된 감귤대북지원은 2002년 1월까지 13,572톤의 감귤과 6,000톤의 당근을 지원해 온 국내의 대표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주도의 <사랑의 감귤보내기> 사업은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100가지의 이론정립보다 1가지의 가시적 실천모형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감귤보내기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내적 추동력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제주도의 남북교류 사업의 확대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한다. 감귤 보내기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곳에서 논의되었지만,(특히 고성준 2003 참조) 여기서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내부 동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감귤보내기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감귤이 제주도의 잉여 농산물이라는 데서 시작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감귤의 생산과잉을 처리하려는 경제적 고려에

5) 문장순(2003, 65)도 “동서독의 경우에도 공식적인 자매결연은 통일 약 4R년 전부터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자매결연의 가능성과 유용성 모두에 회의를 표하고 있다.

6) 양현모(2002, 97)의 지적처럼, 중앙 정치권 차원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이 여야간의 이념적 대치와 시각 차이로 정체상태에 놓이게 될 때에도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들의 정치적 신념과 소속 정당의 당론과 관계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의해서 북한에 감귤을 보낸다고 해도 감귤을 보내는 데 따른 운송 및 관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잉여농산물의 처리로만 바라보는 경제논리는 상당히 편협된 시각이다. 당연히 감귤보내기 사업이 성공을 거두는데는 남아도는 잉여 농산물을 어떻게 보다 건설적이고 의미 있게 처리하느냐 하는 대응방안 모색에서 보다 넓은 안목과 기획 그리고 열정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다만 제주도에서 북한에 감귤을 보내기로 하는 선택에서 제주 특산물인 감귤이 마침 과잉 생산되고 있었다는 현실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지적하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감귤의 과잉생산은 처음에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북한에 구호물자를 보내듯이 감귤을 보내기로 전도민적 사업을 벌일 때 제주도의 다수 감귤 농가로부터 물자 지원 얻어내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⁷⁾

제주감귤 보내기의 성공은 또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이 당시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호흡을 맞추면서 진행되어 나가는 정치적 흐름으로부터도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지난날 남북교류에서 창구단일화=사실상 정부의 창구독점을 주장하던 데서 벗어나 기업,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학, 종교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보다 활발하게 대북교류를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으로부터 힘입은 바 크다.⁸⁾ 이렇게 역대 한국의 정부 가운데 대북정책에서 가장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던 김대중 정부가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에 중점을 둬 따라 제주도 지방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 학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 제주도내 시민사회로부터의 성원이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의 섬 제주의 추진에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었다. 특히 사단법인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의 노력으로 제주와 북한을 직접 잇는 독자채널이 마련됨으로써 제주도민의 자긍심과 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이 충족되는 효과는 감귤보내기의 활력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⁹⁾

7) 최근 제주도는 북한에 감귤보내기가 일정하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토대 위에서 향후 제주의 감귤과 북한의 모래를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8) 특히 지방정부 차원의 대북교류와 관련하여 김대중대통령은 2000년 11월 3일 경상남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남북문제는 정부만의 것이 아니고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북한과 상대하고 교류해 민족적인 이해의 기반을 넓히는 게 필요”(『한국일보』 2003년 11월 3일)하다고 언급하였다.

9) 제주-북한간 직접 채널이 미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와 관련하여 전남남북교류협의회

물론 감귤보내기의 이러한 성원과 지지에는 근원적으로 1945년 이후 분단을 넘어서서 하나의 통일된 국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당위론적이고 사명의식적인 한국민족주의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공통의 언어와 5천년에 걸친 공통의 역사 그리고 생활공동체의 공통된 풍습과 경험을 하나로 통합시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서로에게 상호이득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이 무의식적으로 감귤보내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감귤보내기의 남북한 교류는 1) 한국 민족주의의 근원적 소망과 2) 탈냉전-세계화 시대의 도래에 부응하는 남한의 대북포용정책 내지는 평화번영 정책, 3) 제주도 감귤의 과잉생산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웃돕기 차원의 인도적 고려가 가미된 정책적 적실성, 그리고 4)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을 통해 제주도의 미래지향을 상생-평화-공동번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제주도의 비전이 결합되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감귤보내기의 성공을 토대로 하여 제주도가 남북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가능 영역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하나의 안으로 제주도의 대북 의료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대북 의료지원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과 제주대학교 병원이 중심이 되면서 제주도의사회, 제주도치과의사회, 제주도약사회, 제주도간호사회 등 제주도에 의료체계의 연합 형태로 추진될 수도 있다. 왜 대북의료지원인가?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전국의 의과대학 가운데 후발 대학이기 때문에 대북의료지원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전국적 내지는 동북아적 지명도와 홍보를 얻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려이다. 둘째, 한국의 고교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로서 의과대학이 1-2위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의과대학에 대한 지망이 직업안정과 같은 경제적 계산 이외에도 남북한 교류와 동북아 평화번영에 동참하는 의과대학으로서의 역할까지 맡을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의과대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보다 다양한 공익적 측면이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셋째, 한국의 의료가 중국에는 7

정영재 사무총장은 광주전남의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성과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협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남북화, 교류·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저변화대를 피하지 못하고 일회성의 행사로 그치는 문제가 발생”(정영재 2003, 44)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천만 한국 민족주의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한다는 것이야말로 북한 주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구호의 차원에서 출발하여 시장개방으로까지 나아가는 한국 의료의 장기 비전이 아니겠느냐는 점이다.¹⁰⁾

필자가 감귤보내기에 이어 대북의료지원에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is oblige)의 시각에서이다. 한반도의 7천만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잘사는 직업으로 의사가 첫 번째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보는 한, 한반도의 특권층이 일정한 정도로는 민족과 이웃을 생각하고 연결짓는 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감귤농가의 이웃사랑에서부터 의사들의 이웃 살피기의 기다란 행렬 속에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직업의 역할이 포함되어 나가는 일련의 운동 속에서 비로소 분단을 넘어 하나 되는 한민족공동체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4. 민족평화축전의 의미와 발전 가능성

2003년 10월 23-27일 5일간 북한의 체육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축구, 태권도, 씨름, 마라톤, 그네뛰기, 널뛰기 등 친선경기를 하고 돌아갔다. 민족평화축전으로 불려진 이번 행사는 중앙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필경 남북한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동시에 향후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제기 될 문제점과 과제를 몇 가지 남겼다.

우선 민족평화축전의 의미에 대해서는 보통 민간단체에 의해 남쪽에서 치러진 최초의 남북한 공동의 체육문화 행사라는 데 두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건대 이번 평화축전에서 민간단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와 닿지 않는다. 남한의 경우 정부의 특정 부서가 주관하지 않는 민간단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대목만 부각될 뿐, 주도적인 민간단체가 누구인지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궁금할 뿐이었다.¹¹⁾ 그리고 북한의

10) 그러나 여전히 제주대의 대북의료지원과 관련하여 제주대학에 얼마나한 이익이 직접적으로 되돌아 오는가의 상호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11) 2003년 민족평화축전의 공식 주최는 김원웅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 이연택 대한체육회

경우 민화협은 민간단체라기보다는 로동당 산하의 정부기구이다. 따라서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이라는 구분과 차별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 더욱이 남북한 교류에서 정부가 하든 민간이 하든 그게 그리 중요한지도 필자는 잘 모르겠다. 누가 하든 남북한 교류협력이 잘되면 좋고 그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 증진되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 하나 정부가 평화축전에 대한 재정지원을 아끼면서 민간단체의 행사라고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현대의 금강산 관광에 쏟아 부은 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의 남북교류에 대한 그 동안의 정부 지원은 어떻게 설명되는 지 궁금할 뿐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데에 있다고 볼 것이다.¹²⁾ 이렇게 볼 때 민간단체의 남북한 교류에 대한 정부의 경비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더욱 확대되리라 여겨지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재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¹³⁾ 어떻게 필자가 볼 때 이번 민족평화축전의 의미는 2003년의 부산아시아게임이라든가 대구유니버시아드경기와 비교할 때 북한 주민들이 고려항공기를 타고 제주에 와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남북한이 메달을 따기 위해 애쓰지 않는 친선경기에 임했다는 것과 남북한 친선경기를 하면서 북한이 그네뛰기라든가 널뛰기 등 전통 민속경기의 묘기를 보여주면서 향후 민속경기의 발전 가능성을 과제로 던져 주었다는 점이다.

둘째, 다른 많은 경우의 남북한 만남과 교류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지만, 민족평화축전에서도 남한과 북한간의 자연적 위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회장이 공동 의장이 된 민족평화축전조직위원회였다.

- 12) 특히 이번의 민족평화축전은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덜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만약 앞으로 제2의 평화축전을 예를 들면 경주에서 할 경우에도 이번과 같이 민간단체의 행사에 대해 정부 지원을 많이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할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 13) 이 점에서 평화의 섬 제주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주평화재단(가칭)을 설립하고 기금을 모아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며, 국제자유도시특별법 52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작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를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나타났다.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경기이고 또 친선경기이기 때문에 남측은 축전의 개최 자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북한은 친선이라고 하면서도 이왕이면 이기고 자랑할 만한 것을 보여주는 데 더 많은 중점을 두었지 않나 생각한다. 필자가 색안경을 쓰고 보지는 몰라도 이번 축전의 경기 종목을 보면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 여자축구라든가 태권도, 민속경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친선경기에서 북측은 이기든가 또는 우월한 재능을 보여주는 데 있고 남측은 이에 박수를 치면서 화답하는 것으로 화기에애한 남북한 교류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필자가 보건대 이러한 남북한 친선경기의 배후에는 최소한 세 가지 측면에서 남한측 이익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¹⁴⁾ 하나는, 무엇보다도 남측은 북한에 대한 양보와 포용을 보임으로써 남한의 우월성을 내부적으로 만끽하고 있다. 필자는 평소에 남북한 교류에 있어서 내재하는 불균형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불균형을 어떻게 서로 다듬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과정으로서의 통일'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만날 때 남측은 서로 보고 싶은 사람끼리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차원의 최우선적 교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만나서 반가움을 표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적어도 남측으로서는 남과 북이 만날 때 내재하여 있는 남한의 우월성에 대한 만끽과 비교우위를 통한 자기만족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이는 곧 남과 북의 만남에는 남과 북의 불균형으로 인해 야기되는 북측의 허전함을 메꾸어 줄 남측의 선물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남과 북의 사전적 불균형은 사후적 정지작업을 통해 보완될 때 남북한 교류가 하나의 민족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평화축전을 통해 남과 북이 만나는 동안 남측은 북측에게 무엇인가의 허전함을 달래주고 남측의 자부심 만끽에 뒤따르는 선물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이 점에서 이번 2003년 민족평화축전에서 보여준 제주도민의 선물은 중앙정부의 인식함에 비해 상당히 풍성했다.¹⁵⁾

14) 민족평화축전의 친선경기에 내재하여 있는 북한측의 이익이 주로 경제적인 것이라면 남한의 이익은 사회심리적-정치적인 데에 치우쳐 있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필자가 보건대 남측의 장기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민족평화축전을 취재한 일본 NTV의 현창일 기사는 "남측이 지나치게 북측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¹제민일보, 2003년 10월 27일)을 받게 된 것이었다.

둘은, 민족평화축전을 치르면서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여러 가지 중단기적 실리를 챙기는 데 부족함이 없다. 축제 그 자체를 쉽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부터 시작하여 축제 기간 동안 제주를 찾은 사람들을 통해 사실상 관광객 유치의 효과를 갖게 된 것이 그것이다. 더욱이 한민족 공동체라든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국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제주도가 그러한 민족적 소망을 조금이나마 앞당기고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대의명분은 분명 제주도민의 자부심을 충족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다. 통일문제라는 거대한 민족주의적 프로젝트는 중앙정부라든가 정치인들만이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지난날의 선입관에서 벗어나 이제 평화의 섬 제주의 깃발 아래 평범한 제주도민들도 민족간 화해-상생-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데 조그마한 주춧돌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은 축전에 대한 제주도민의 동참과 의미를 크게 확대시켜 주었다. 또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을 통해 제주도의 가치와 역할을 증진해 나가고자 애쓰고 있는 시점에서 평화축전은 이러한 장기 프로젝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TV를 통해서 한반도 방방곡곡에 이러한 제주의 위상과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또한 예를 들면 태풍으로 인해 훼손된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이 예산이 없어 복구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축전을 위해서 긴급 복구자금이 지원되어 말끔히 수리할 수 있는 것도 분명 하나의 이득이다. 또한 필자처럼 평화의 섬 제주의 사업활동과 미래 방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에게 민족평화축전은 제주도의 남북한 교류 사업의 목록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서 향후 제주도의 미래 가치를 증진하는 다양한 비전을 추구하는 데 여러모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셋은, 남측의 양보를 통하여 남과 북이 자주 만나고 교류하다 보면 남과 북이 원래 하나의 민족이니까 1민족 1국가의 원리에 맞추어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흐름이 거세게 불게 될 터인데, 이 때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남한 쪽으로 기울어진 그러한 형태의 통합이 이루어지리라 기대된다는 점이다. 불가피하게 남쪽에 살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왕이면 남쪽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여러 가지로 편하고 안심되며 직·간접

15) 특히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가 준비한 목초종자1.755kg(1만 달러 상당)은 큰 선물이었다.

적인 이득도 보장되리라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필자의 생각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남한들이 공유하는 바일 것이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남한 주도의 통일이 가져다 줄 유·무형의 이익을 고려하면, 이번 민족평화축전에서 친선경기는 월드컵경기라든가 아시안게임과 같은 승부와 기록 중심의 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민족평화축전이야말로 애초의 올림픽경기 정신과 취지에 부합한 축전이었다고 볼 것이다.

민족평화축전의 발전 가능성과 관련하여 축전기간 내내 다양한 목소리로 축전을 정례화하자는 얘기가 오갔다. 그러나 민족평화축전의 정례화에는 무엇보다도 제주도민들의 기대 상승을 전제로 하여 민족평화축전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공감대 확산이 우선적으로 중요함을 지적해야 하겠다. 물론 민족평화축전 과정에서 제주도민과 북측 참가단 사이에 나눈 교감과 아무런 조건 없이 따뜻한 웃음을 나누었던 경험은 향후 민족평화축전의 가능성과 방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민족평화축전의 단기적인 비용-효과 분석도 중요하지만, 또한 단순한 단기적 이익 계산을 넘어서서 장기적이고 파급적인 연관효과를 심층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¹⁶⁾

어떻든 민족평화축전의 정례화는 이 축전의 가치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입장이 제고되어야 한다. 남북한 교류협력은 민간 차원의 것이든, 정부 차원의 것이든 모두가 다 정치적 내지는 민족적 차원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거시적 인식과 자세가 요청된다. 2003년 민족평화축전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정부가 민간 차원의 남북한 교류행사로만 격하시키는 것은 남북한 교류협력을 바라보는 정부의 근시안적 시각과 지방 수준의 행사에 대한 홀대가 깔려 있어서는 정례화가 어렵다. 모든 형태의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정부가 다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논쟁의 초점은 정부 행사냐 민간 행사냐가 아니라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교류냐 하는 사업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민족평화축전과 같은 남북한 교류협력 행사가 반드시 제주에서만 개최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적 수준의 행사가 아니라 지방에서 진행되는 전국적 수준의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체계 정

16)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가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에 의뢰한 민족평화축전 효과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가 요청된다.

또 하나 민족평화축전의 정례화와 관련한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어야 한다. 2003년 민족평화축전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정부의 비용지원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축전의 정례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부실화와 문제점 노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민족평화축전과 같은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정부가 얼마나한 지원을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혹은 정부 지원의 상-하한을 제도화해 주어야 다음에 혹 축전이 개최될 경우 불필요한 논쟁과 줄다리기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 비용 문제가 사전에 상당한 수준으로 걸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족평화축전의 정례화와 관련하여 예술공연에 대한 개런티 지급 등 축전 개최에 따른 대북 사례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남한 사회 내의 정리가 있어야 할 것임을 뜻한다. 이 경우 월드컵 유치에도 돈이 든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 동시에 월드컵 관람은 티켓을 판다는 점에서 월드컵과는 구별되는 민족평화축전의 민족사업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평화축전을 제주에서 정례화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민족평화축전이 제주에서 개최되도록 정례화하는 것은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구현과 실제적 역할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민족평화축전을 제주도에 한정시키는 독점적 사업으로 만드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교류사업은 중앙정부의 독점물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의 독점물이 될 수도 없는 공공재라는 입장에서 정례화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고, 이런 점에서 향후 평화의 섬 제주의 사업은 다양성과 유연성 그리고 다른 지방과의 공동보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민족평화축전이 정례화될 경우 서울 개최를 삼가하고 지방에서 개최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적 수준의 다양한 문화와 향토성을 살려 남북한 교류협력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족평화축전의 정례화와 관련하여 지방에서의 개최에는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기관이 협력과 공조를 취하는 연대를 통해 공동 주체가 되어 보다 책임성과 독자적 역할을 맡도록 해야 행사 준비와 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¹⁷⁾

5.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신의주특구와의 교류 확대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남북한 평화공영으로 나아가는 21세기 신남북시대에서 지방정부로서의 제주도 또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제주도가 북한의 어느 지방과 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고 체계화해 나갈 필요성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통상 지방 공동체간의 특별한 관계설정을 논의하는 데는 자매결연이라는 형태로 교류, 협력 및 유대 강화를 고려하는 것이 대표적인 접근방법이다. 지자체간 자매결연은 지역끼리 각각의 사업 규모와 사안 그리고 분수에 맞게 교류를 진행함으로써 지역협력의 점들이 이어져 선과 면이 되고 다시 입체가 된다는 단계론적 협력방안 논리에 근거하여 자주 권고되고 추진되는 교류협력 방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주도가 남북한 교류협력의 일익을 담당하려는 의도 하에 북한의 어느 지방과의 교류협력의 확대방안을 논의할 때마다, 한반도의 최남단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고 한반도의 최북단 양강도에 백두산이 있고 해서 남북한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 구호인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에 부응하여 제주도와 양강도 간의 자매결연을 권고하고 의미를 부여해 왔고.(고성준 1995) 실제로 2003년 8월 제3차 제주도민 방북시 강기권 남제주군수가 남·북한 최남·북단 자치단체 결연을 제안하기도 했다.(『한라일보』, 2003년 9월 1일) 그러나 2003년 현재 남북한 지자체간 자매결연은 전남남북교류협회의 꾸준한 노력 끝에 2003년 4월 성사된 전남-평남간 교류협력사업 합의서 교환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⁸⁾

필자 역시도 전남-평남 모델에 비추어 제주도-양강도¹⁹⁾ 또는 제주도-자강도²⁰⁾ 또는 남제주군-삼지연군간의 자매결연이 함축하는 상징성을 내세워 남북

17) 민족평화축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주민의 주체화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중앙집중을 넘어 지방과 지방의 연결을 통한 남북한 교류내용의 다양화와 틈새 시장화를 도모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18) 전남-평남 2003년 교류협력사업은 평안남도 대동군에 남북 공동으로 '대동농기계수리공장'을 건설하고 '남북시범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정영재 2003, 48)

19) 한국청년회의소는 2000년 9월 북한관광지역 백서를 발표하면서 제주지구는 양강도와 연결시킨 바 있다.(문장순 2003, 77)

20) 제주도-자강도 자매결연은 천주교가 2000년 춘계 주교총회에서 '남북 14개 교구와 북녘 시도 자매결연' 추진을 표명하면서 제주교구는 자강도와 연결지으려고 한 데에 따른 것이다. (『가톨릭신문』, 2000년 4월 9일)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제주도-양강도 또는 남제주군-삼지연군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데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다. 그러면서도 한라-백두의 자연적 특성 못지않게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도의 미래 비전과 신의주 경제특구라는 신의주의 미래비전의 공감대를 지렛대로 하여 제주도-신의주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실리가 있고 제주도민의 풀뿌리 지지를 얻는데도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더욱이 노무현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건설뿐만 아니라 한중일 모두가 최종적으로는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를 구상·추진하고 있는 21세기 동북아 신질서의 흐름에서 보면, 제주도-신의주 특구간 네트워크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김원배의 지적처럼,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우선적으로 한중일 3국의 경제특구간에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물류의 표준화를 추진할 필요”(김원배 2003, 38)가 있는데, 이와 같은 국지적인 차원에서의 연계협력의 하나로 제주도-신의주간의 자매결연의 선도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여기서 제주도의 대북 자매결연 내지는 특별한 관계 설정의 지역으로서 신의주 경제특구를 지목하는 이유를 ‘기능적 접근’²¹⁾의 시각과 남과 북 모두의 실익이라는 입장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감귤보내기의 성공에서 무엇보다도 제주도민의 아래로부터의 호응이 가장 중요한 추동력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마찬가지로 대북 자매결연의 경우도 제주도민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열정이 뒷받침될 때 보다 의욕적이고 활발히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본다. 이는 왜 북한과의 자매결연인가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것인 동시에 제주도-신의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제주도가 단기적으로는 투자적 성격의 대북지원을 하는 데 대해 보다 합리적인 이유와 이해타산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아래로부터의 호응과 지지를 얻어내기가 쉽다는 데에 있다. 필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청정환경이라는 비교우위 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도의 한반도내의 일국내 지역이라는 국민국가 제약적인 특성을 넘어서는 코스모폴리탄적 내지는 동아시아공동체적 특성을 창출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21) 기능적 접근이란 교류협력 대상 지자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자체의 규모·기능·인구수 등 지자체의 특성과 지리적 근접성 등을 기준”(최진욱 2002, 117)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제주-신의주 연계는 경제특구라는 기능적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신의주 경제특구와의 특별한 관계라든가 또는 오키나와라든가 중국의 해남도나 같은 지역과 특별한 교류채널을 갖추어 나가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데, 여기서 북한 지역인 경우는 신의주 경제특구가 가장 유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²²⁾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사람-자본-상품이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향후 북한의 지방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가장 크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신의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제주에서 신의주로 그리고 신의주에서 제주로의 사람-자본-상품의 이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하고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것은 상당한 유용성을 갖는다고 본다.

북한의 경우도 제주도와의 자매결연을 허용하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득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신의주 특구를 운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중국과의 경제협작 또는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외국기업을 신의주에 유치하여 이를 통해 북한 경제의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데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 목적이 보다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의 운용을 위한 준비와 추진과정에서 보다 편하게 적은 비용으로 자문하고 실제의 경험을 둘러보는 사전과정이 있으면 시행착오의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바로 여기서 지역경제의 위기돌파와 세계화로 나아가는 데 한 걸음 앞서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준비과정과 추진과정은 북한의 신의주 특구에 많은 시사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북한경제를 자본주의적 관점과 경영방식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데 신의주 경제특구의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평화의 섬이자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에 와서 실무연수라든가 견학, 또는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은 북한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제안이라고 여겨진다. 자매결연이란 바로 이러한 상호교류와 접촉을 지원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절차와 경비, 인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제공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신의주 경제특구간의 자매결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두 도시간

22) 제주도-신의주간의 자매결연을 일대일로 추진할 때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제적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의 제주국제자유도시와 북한의 신의주특구 그리고 일본의 오키나와나 중국의 해남도를 동시에 엮는 다자간 자매결연을 도모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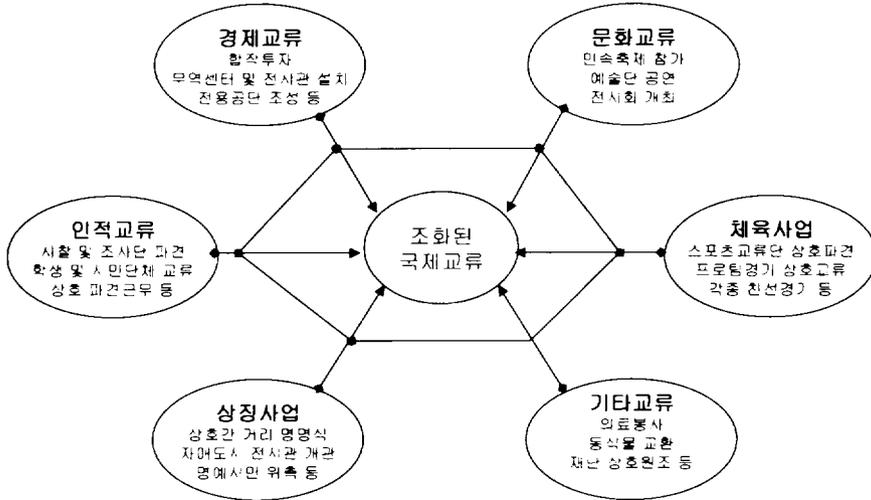
네트워크의 운용에 대해 정부 및 제주도의 지원이 하나의 시스템화하여 진행되어 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신의주 경제특구간의 자매결연은 이 두 개의 거대 프로젝트가 상호간에 경합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신의주에는 이미 기계, 화학섬유, 방직 관련 공장설비가 들어서 있으며 화학섬유, 신발, 화장품, 제지 등 경공업 부문의 생산 비중이 높으며, 따라서 향후 신의주 특구에서는 경공업분야를 중심으로 단순위탁가공, 설비제공형 위탁가공 및 합작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청정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휴양도시 그리고 첨단지식-물류-금융이 결합된 복합기능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신의주 특구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직접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방청록 2002, 98-99) 물류와 관련해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항공물류에 기반을 두게 되는 데 반해 신의주 특구는 철도와 도로를 중심으로 한 육상물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면 두 도시간의 물류업 발전계획에서 상충되는 부분은 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신의주 특구가 상호 경합보다는 상호 보완 및 호응의 관계에서 주고받을 것을 찾는 공동의 노력을 제도화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주도-신의주간 자매결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6. 결 론

지금까지 제주도가 보다 선도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21세기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지방분권이 중시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남북한 교류협력도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방주민 등 주체의 다양화로 나타나고 있으며,(양길현 2001, 109)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최남단 지역인 제주도의 독특한 역할 가능성이 모색되어 왔고 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왔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가능성을 한데 모아 향후 제주도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의 모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이 평화의 섬 제주의 비전과 유기

적 연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조직화된 국제교류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그림> 제주도의 남북교류 형태

출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2001), 25쪽 참조

제주도의 남북한 교류협력은 지난 7년간에 걸친 <사랑의 감귤보내기>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2003년 민족평화축전과 같은 체육-문화교류에 이어 경제교류(예를 들면 제주국제평화센터에 북한특산물관 설치), 인적교류(한라-백두산 공동연구²³⁾, 북한 학생 및 시찰단 파견,²⁴⁾ 고인돌취재 북한 방문²⁵⁾, 상징사업

23) 두만강 유역을 비롯한 백두산 일대는 1989년에 그리고 한라산은 2003년에 각각 유네스코로부터 국제생물권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어서 두 지역에 대한 인문적-자연생태적-생물학적-지질학적 학술탐사를 위해 남북한이 공동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2002년 11월 25-30일 제2차 제주도민 방북시 한라산-백두산 공동 학술탐사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바 있고, 2003년 8월 25-30일 제3차 제주도민 방북시에는 리종수 천지연구소 소장과 2004년 6·15 남북공동선언 시기에 맞춰 한라산-백두산 공동 탐사를 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2003, 교류151-152)

24) 2002년 11월 25-30일 제2차 제주도민 방북시 남북한 고교축구팀 친선경기 및 청소년 체육교류 그리고 관광노하우 연수를 위한 북한 관계자 50여명의 제주 초청방문 등 상호 가능한 인적교류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있다.

25) 예를 들면 2001년 11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북한 민화협과 북측이 2002년 5월

(제주도-신의주 자매결연과 상호간 거리 명명식), 기타교류(대북의료봉사지원, 항만공사지원, 다년생 잡초종자 지원²⁶⁾ 등)를 아우르는 조직화된 교류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출범과 2003년 10월 31일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육성하겠다는 노무현대통령의 언명 그리고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하는 정부의 정책이 의미하는 바는 제주도가 중국에는 기존의 국내법 체계와는 다른 법체계 내지는 외국인출입법, 외환관리법, 관세법 등에서 예외적인 특별지역 내지는 특별지역으로 간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제주도가 단순한 경제특구를 넘어서서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특별자치도를 지향한다는 것은 일면 제주도가 북한 사람들 자유롭게 오도록 하는 시범지역으로서 나아가는 것을 뜻할 수 있다. 북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한민국으로 쉽게 오가도록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치 개성특구를 통해 우리가 북한에 보다 쉽게 오갈 수 있듯이 북한사람도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 오가도록 하는 데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그리고 특별자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제일 적합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제주대학교에 공부하러 오든, 아니면 앞으로 구축될 첨단과학단지에서 IT나 BT를 배우러 오든, 혹은 제주도 관광업계에 일자리가 있어 임시 취업을 하든, 북한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와서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허용해 주는 것도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그리고 특별자치도로 가는 여정에서 제주도가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가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초순에 고인돌취재를 위해 5-7명의 인원을 평양에 방문하도록 초청하며 이에 따른 기술(녹음, 녹화설비)적 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성준 2003, 13)

26) 2003년 8월 제3차 제주도민 방북시 북한은 제주도에 "항만공사와 고기잡이 등에 대한 교류와 비료 지원, 비름 등 다년생 잡초종자 지원, 감귤 추가지원 등을 요청"(『한겨레』 2003년 9월 2일) 등을 요청한 데 대해,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03년 10월 민족평화축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을 통해 목초종자 1.755kg(1만 달러 상당)을 선물로 전달했다.

참고문헌

- 『가톨릭신문』, 2000년 4월 9일
- 고성준, 2003. “제주도의 대북 지원 및 교류사업의 성과와 과제.” 2003년 5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주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세미나>에서의 발표 논문.
- 고성준, 1995. “통일시대와 제주도의 역할.” 『동아시아연구논총』, 제8집.
- 김원배, 2003. “동북아중심 구상의 재검토.” 『창작과비평』, 여름.
- 남북교류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2003. 『남북통일의 디딤돌 놓다 3』, 제주: 온누리인쇄문화사.
- 문장순, 2003. <지방정부의 대북교류협력>.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총서 03-02.
- 방청록, 2002. “신의주 특별행정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대응.” 2002년 11월 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 주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대응방안> 정책세미나에서의 발표 논문. 양길현, 2001. “남북한 지역협력과 제주도의 역할.” 『제주발전연구』, 제5호.
- 양현모, 200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6권 제2호.
- 정영재, 2003. “전라남도의 남북교류협력.” 2003년 5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주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세미나>에서의 발표 논문.
- 최진욱, 2002. “남북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강태훈 외, 『동아시아 지역 질서와 국제관계』, 서울: 오름.
- 『제민일보』, 2003년 10월 27일
- 『한국일보』, 2003년 11월 3일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
- 『한라일보』, 2003년 9월 1일